

‘나주 부부 살해범’ 박용수, 1100만원 빼돌려 도박 탕진

머그샷 등 신상공개...피해자 계좌서 2차례 인출
경찰, 용의주도 계획범죄 무게...내일 공소청 송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은 박용수(53)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경찰이 범행 전후 행적과 금전 거래 등을 토대로 계획범행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용수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shot·인상착의 기록사진) 등을 누

리집에 게시했다.

뚜렷한 직업이 없는 박용수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30일 후인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이다.

전남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박용수도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이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2024년 9월 순천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박대성에 이어 두 번째다.

박용수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나주시 왕곡면의 한 단독주택에 점입해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다음 날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용수가 범행 직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부부가 사는 마을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범행 후에는 피해 남편 소유의 1t 화물

차에 자전거를 싣고 이동했다가 차량을 버린 뒤 다시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다. 도주 과정에서 이용한 자전거 역시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 명의의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용수가 이 돈을 광산구 한 성인게임장에서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박용수는 게임을 이어가기 위해 피해자 계좌에 있던 500만원을 게임장 업주에게 추가로 이체해 게임포인트를 충전하는 등 총 1100만원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박용수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나, 범행 후 금품을 취득하고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이체한 정황 등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지난 9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용수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용수는 피해자 자택에 있던 흥기를 우발적으로 휘둘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전 피해 부부의 주거지를 여러 차례 답사한 행적과 도주 과정, 범행 후 금전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용의주도하게 계획된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흥기를 찾기 위해 과학수사대와 소방 등과 함께 5일간 연산강 일대를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흥기를 소지한 채 현장을 찾았다거나 사전에 준비·구매한 정황도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해 범행 동기와 실제 채무 관계 등을 확인한 뒤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6일께 박용수를 광주지방법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건설현장 작업반장 갑질 의혹...일부 사실로 종교 강요·고추장 강매·접대 요구 등 8건 조사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직영 작업반장이 근로자들에게 교회 참석과 물품 구매를 강요하고 접대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 측은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노동당국도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나섰다.

14일 본보 제보 내용 등에 따르면 해당 현장 직영 작업반장 A씨와 관련해 지난 8월 26일 회사에 모두 8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에는 종교 활동 강요와 고추장 강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접대 요구, 다른 작업장 근로자 괴롭힘 등의 의혹이 담겼다. 문제 제기 이후 제보자를 찾으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보자들은 A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한 달에 3차례가량 일요일마다 근로자들에게 교회 참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묻거나 종교 활동 참여를 압박했으며,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교회에 다니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모욕적인 발언도 했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만든 토마토 고추장을 현장 사무실 내 직영 창고에서 판매하면서 구매를 사실상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추장은 1통에 2만5000원에 판매했으며, 구매를 거부한 근로자들이 업무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

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가 계약직 근로자에게 접대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해당 근로자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주변에 퍼뜨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른 작업장 근로자를 괴롭히고 제보 이후 신고자를 찾으려 했다는 주장도 제보 내용에 포함됐다.

한 제보자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관계 때문에 교회 참석이나 물품 구매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문제 제기 이후에도 제보자를 찾으려는 분위기가 있어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노동 전문가 A씨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종교 활동이나 물품 구매를 강요했는지, 거부 이후 업무 배정이나 근무환경에서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중요하다”며 “제보 전후의 근무 배정과 업무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난달 17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해당 건설현장의 갑질 의혹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원청업체 소속 관리자가 인력공급업체 소속 노동자를 강제 해고하고 취업 청탁을 압박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연 최고 578%’ 고금리·불법추심 20명 검거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기고 채무자의 가족에게까지 빚 독촉을 한 불법사금융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불법 채권추심한 혐의 등으로 20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속된 50대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채무자 8명에게 3800만원을

불법 대출하고 연 66~328%의 이자를 적용해 총 4241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40대 B씨는 202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채무자 11명에게 4703만원을 불법 대출하고 연 184.5~578.2%의 이자를 적용해 총 6005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임영진 기자



2026 광주 학교밖 청소년 문화축제 14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쌍촌동 광주학생교육 문화관에서 열린 ‘2026 광주 학교밖 청소년 문화축제’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교 밖 도전기 수상자들의 토크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는 광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과 지도자, 보호자들이 함께 모여 연대하고 청소년의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박군택 “5·18 정신적 손해배상액 최대 4배 격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피해 산정기준, 국회의 입법 선택의 몫”

더불어민주당 박군택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갑)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5·18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도 법원별로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문제를 지적하고, 판결이 이미 확정돼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국가가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2021년, 기존 보상에 정신적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19헌가17).

이에 기존 보상을 받은 5·18 피해자들도 별도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후 위자료 산정이 각 법원의 제량에 맡겨지면서 동일한 피해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배상액이 2~4배 차이 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배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부족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박군택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제시된 기준에 따른 보상금에서 기존 배상 판결 원금과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국가가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정판결을 바꾸거나 기존 배상액을 줄이지 않고, 별도의 보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 손인혁 사무처장은 개정안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국가가 법률로 법관에게 재판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적 피해 산정이 곤란하다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며 “국회의 입법 선택의 몫”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동일한 피해 내용에도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불균형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부족한 배상은 국가가 추가 보상에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 불로 기숙사 집기류 일부가 타고 건물 내외부 벽면이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748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의 연기와 유독가스를 제거한 뒤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경찰 과학수사대도 추가 조사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침대와 콘센트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남부대는 화재가 발생한 호실의 학생들을 예비 호실로 이동시켰다.

대피한 학생들은 기숙사 1층 강당에 모여 인원 확인과 건강 상태 점검을 받았다.

남부대는 관산소방서와 함께 14일 오후 7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 요령과 완강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기숙사 대피 체계와 화재 대응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메가박스 광주상무점 현재상영작

새롭게 개편된 리클라이너 영화관! 메가박스 광주 상무점에서 만나요!